

경제관계장관회의 결
성장전략 TF
25-15-2
(공개)

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

- 26.1/4분기 중점 추진과제 중심 -

2025. 12. 31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I. 추진배경	1
II. 추진현황	2
III. 추진방향	3
IV. 세부 추진과제	4
1. 동절기 물가안정	4
2. 한파 대비 난방·건강 지원	5
3.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안정 지원	7
4. 동절기 국민 안전 확보	11
V. 추진계획	13

I. 추진배경

① 동절기 취약계층 어려움 가중 → 관계부처 대책^{11월} 마련하여 추진 중

- 겨울철은 한파 등 영향으로 난방·돌봄·소득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시기
- 지난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'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'(11.28일)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 중(→II. 추진현황 참고)

② 최근 먹거리·석유류 등 물가 상승으로 취약계층 어려움 지속

- 12월 소비자물가는 2.3% 상승하여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, 먹거리와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

* 소비자물가상승률(전년동월비, %): ('25.1/4) 2.1 (2/4) 2.1 (3/4) 2.0 (10) 2.4 (11) 2.4 (12) 2.3

** 12월 품목별 상승률(전년동월비, %): (전체)2.3 (농축수산물)4.1 (가공식품)2.5 (외식)2.9 (석유류)6.1

▪ 필수생계비* 지출비중**이 높은 취약계층 부담 지속

* 식료품·비주류 음료, 주거·수도·광열(연료비 포함), 교통, 식사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

** '25.3분기 가구 분위별 필수생계비 지출비중(%): (1분위)71.4 (3분위)39.6 (5분위)27.3

③ 겨울철을 맞아 난방·건강 등 취약계층 어려움과 연말연시 안전위험도 증가

- 12월 이후 겨울철 한파가 본격화됨에 따라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건강 악화도 우려
- 해넘이·해돋이 행사 등으로 인한 연말연시 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및 폭설·결빙으로 인한 도로 교통사고 위험 증가
- 사업장 및 전통시장 등 주요 민생시설 안전사고·화재 등도 우려

◆ 既 추진 중인 '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지원대책'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, 안전관리 분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 마련

⇒ ①동절기 물가 안정, ②한파 대비 난방·건강 지원, ③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지원, ④동절기 국민 안전 확보 중점 추진

II. 추진현황

- ◇ 12.31일 현재 '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'(25.11월, 관계부처 합동) 차질 없이 추진 중 → 금번 대책은 **물가·안전**을 포함하여 보완 추진

추진과제 목록	이행현황	소관부처
1.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		
① 빅데이터·AI 기반 사각지대 발굴	· '25년 6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중(12.1~1.23일, 2만명 대상) · AI초기상담 도입, 위기가구 대상 문자메시지 61,527건 발송(~12.12일)	복지부
② 지역사회중심 민합협력 위기가구 발굴	· 찾아가는 상담 42만건, 민관복지서비스 연계·제공 55만건(11월말) ·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26.7만명 활동(12월말)	복지부
③ 생애주기별 위기 대상자 발굴	· 전기검침망을 활용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 협력 한전MCS 업무협약 체결(25.11월) · 전년 동월(11월) 대비 복지위기알림앱 가입자(25.11월) 196%(2,875명) 증가 · 거주불명 노인 등록자 기초연금 신청안내 홍보 총 735건(전년대비 137.6% 달성, 12월말)	복지부
④ 복지서비스 자격 안내	· 복지멤버십 지자체 안내사업 34종 확대 완료(12.22일)	복지부
2. 대상별 맞춤형 지원		
① 노인 및 장애인	· 취약노인 안전확인(139,410건, ~12.11일 누적) 및 지원(약 4만명, 8억원 상당) · 독거노인장애인(28만 가구) 모니터링 및 한파시 기상상황 알림 등 지속	복지부
② 노숙인 및 쪽방주민	· 노숙인 상담 4,631건, 물품지원 23,314개, · 쪽방주민 상담 77,958건, 물품지원 5,885개(11월말) · 응급잠자리 277개소 마련(11.17일)	복지부
③ 국가유공자	·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겨울나기 물품 지원(12.8~16일) * (대상) 고령 독거 국가유공자 3,400명 (내역) 생필품, 방한도구, 식료품 등	보훈부
3. 한파 대비 난방·건강 지원		
① 저소득층 난방지원	·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다자녀가구 추가(11월~)	기후부
	· 1.5천가구 대상 22.7천m ³ 난방용떨감 지원 중(11월~)	산림청
② 시설 한파 대비 철저	·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계획* 수립·배포(12.5일) 및 난방비 지원조치 요청(복지부→지자체, 25.12월) * '26.1~2월 약 7천개소 월30~100만원 지원 · 사회복지시설 지자체 현장점검 5,712개소 완료(12.26일) ·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안내(10.22/11.13/11.26일)	복지부
4.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		
① 저소득층 생계지원	· 긴급복지 동절기 난방비 추가 지원중(25.10~26.3월), 긴급 복지지원 홍보물(장갑) 배부(5천개, 12월초) · '25년 재난적의료비 182,403백만원 지급	복지부
② 주거위기가구 지원	· 긴급지원주택 입주, 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행 중	국토부
③ 겨울철 근로공백 방지	· 장애인일자리(26.1월~) 관련 참여자 조기 모집(35,846명, 11~12월)	복지부
5.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		
① 민관 협력을 통한 나눔문화 조성	· 먹거리·생필품 '그냥드림' 69개소 운영, 15,402명 지원(1,485명 기초상담, 185명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포함) · 한국청과와 '그냥드림' 2억원 후원 협약체결	복지부
② 자원봉사·기부 활성화	· 취약계층 긴급구호 위해 기부식품(취약계층 7,000팩, 결식아동 4,000팩) 지원	복지부

Ⅲ. 추진방향

목표

모두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

기본 방향

소비자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,
난방·건강 등 생활 안정 지원 및 동절기 국민 안전 확보

중점 추진 과제

동절기 물가 안정

-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및 부담 완화
- 설명절 대비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및 수급점검
-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
-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패스(‘모두의 카드’) 출시
- 천원의 아침밥 대폭 확대 및 점심값 지원

한파 대비 난방·건강 지원

- 취약계층 대상 신속·충분한 난방 지원
- 고위험군 무료 인플루엔자·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
- 방문·전화를 통한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

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안정 지원

- 시·지역사회 기반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
- 노인·장애인·노숙인·아동 등 맞춤형 지원
- 소득·주거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
- 그냥드림 사업 확대 등 나눔문화 확산

동절기 국민 안전 확보

- 연말연시 인파밀집지역 집중 안전관리
- 폭설·결빙 대비 도로 등 안전관리
- 민생시설 화재 등 안전점검
- 사업장·노동자 안전관리
- 전통시장 안전관리

IV. 세부 추진과제

1. 동절기 물가안정

◇ 공공요금, 먹거리, 에너지, 교통비, 식비 등 동절기 핵심생계비 물가 안정 노력을 통한 민생부담 경감

- **(공공요금)**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,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·이연 등 국민 부담 완화
- **(먹거리)** 연말까지 진행 중인 농축수산물 할인행사*에 이어, 설 명절에 앞서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수급동향 점검
 - * 12.31일까지 배추, 돼지고기,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25종 최대 50% 할인
 -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(AI) 확산 차단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, 필요시 별도의 수급 안정방안 마련
 - * 방역수칙 위반 농가 처분(과태료, 살처분보상금 감액 등), 위험지역 특별점검(12.26~), 전국 산란계 일제검사(12.18~31일 등)
 - '26년 농식품바우처('26.1.2~'26.12.31일) 대상을 청년 포함 가구까지 확대* 및 지원기간 연장** (10→12개월)
 - * (현행) 임신부18세 이하 자녀 포함 생계급여 가구 → (추가) 34세 이하 청년 포함 생계급여 가구
 - ** (현행) 10개월(3~12월), 월 10만원/4인가구 → (개선) 12개월 연중 지원, 월 10만원/4인가구
- **(에너지)** 유류세 인하* 및 경유·CNG 유가연동보조금** 지급 연장(~'26.2월)
 - * 인하폭: (휘발유) △7%(△57원) (경유) △10%(△58원) (LPG) △10%(△20원)
 - ** 지급액: (경유)1,700원/ℓ 초과분의 50% (압축천연가스)1,330원/m³ 초과분의 50%(183.21원/ℓ·m³ 限)
- **(교통비)** 일정금액(6.2만원)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분을 100% 환급하는 정액패스('모두의 카드')* 신규 도입('26.1.1일~)
 - * 수도권 기준 6.2만원(청년·어르신2자녀 5.5만원, 3자녀저소득 4.5만원 등) 초과 이용분 100% 환급
 -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K-패스 환급률 확대(20%→30%)
 - * K-패스 환급률(%) : 일반 20, 청년 30, 2자녀 30, 3자녀 50, 저소득 53.3, 어르신(신설) 30
- **(식비)** 지방* 중소기업 재직 직장인(5만명)의 주중 점심값 20% 지원 시범사업 실시(1인당 월 4만원 限, '26.5월~10월)
 - * 대상 지역은 산단 보유 여부 및 인구 감소지역 등 고려하여 공모로 선정
 - 대학생·산단근로자 대상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('26.1월)
 - * (현행) 年 대학생 450만식, 산단근로자 5만식 → (개선) 대학생 540만명, 산단근로자 90만식

2. 한파 대비 난방·건강 지원

- ◇ **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원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**하고, 무료 예방접종 및 방문관리를 통한 **선제적 건강관리 지원**

1 취약계층 난방지원 확대

- **(에너지바우처 확대)**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**등유·LPG**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지원 금액 **14.7만원** 추가 지급(36.7→51.4만원)
 - * (사용기간) '26.1.22~5.25일 (지급방식) 추가지원금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
- **'찾아가는 에너지복지서비스'**를 통한 사각지대 개선
 - * 바우처 미사용 세대에 직접방문해 바우처 사용지원 및 에너지 사용 컨설팅 실시
- **(전기요금 할인)** 장애인·유공자·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(~'26.3월) 월 최대 **1.6만원** 요금 할인, 누락가구 적극 발굴*
 - * 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해 복지할인 자격자 정보 확보 → 누락자 연락신청 지원
- **(도시가스 할인)** 장애인·유공자·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(~'26.3월) 월 최대 **14.8만원** 지원, 가스공사가 대상자 발굴*
 - * 대상자의 동의를 수취 후 거주지의 도시가스사에 요금경감 신청서 발송
- **(연탄쿠폰 지급)**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및 에너지소외계층*에 연탄소비쿠폰(가구당 47.2만원) 지급(~'26.4월)
 - * 65세 이상, 장애인, 중위소득 65% 이하 한부모, 소년소녀가정 등
- **연탄쿠폰 수급가구 대상 난방시설 교체 지원**('26년 3,000가구)
- **(땀감 지원)** 취약계층* 중심으로 가구당 약 **5톤**(160일분, 35만원 상당)의 난방용 땀감 지원(~'26.2월), 국·사유림 내 발생 부산물을 땀감으로 활용**
 - * 독거노인, 소년소녀가정, 생계지원 대상자, 장애인 등
 - ** 숲가꾸기 패트를 인력 활용하여 겨울철 집중적으로 지원(~'26.2월)

- **(복지시설 난방비 지원)** 전국 경로당(6.9만 개)에 난방비 월 40만원 지원 ('25.11월~'26.3월, 5개월), 미등록 경로당(1,604개)도 동일하게 지원
 -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(약 7천 개)에 시설 종류·규모에 따라 난방비 월 30~100만원* 지원('26.1월~2월, 2개월분)
- * 생활시설 : 30만원(1~50인), 50만원(51~100인), 100만원(101인~) / 이용시설 : 30만원
- **(난방효율 개선)**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난방 효율 개선을 위해 단열·창호공사, 고효율 보일러 보급 등 지원

2 선제적 건강관리 지원

- **(무료 예방접종)**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*의 인플루엔자 및 **코로나19** 감염 시 중증화·사망 예방을 위해 무료 예방접종 시행(~'26.4월)
 - * (인플루엔자) 65세 이상, 생후 6개월~13세 어린이, 임신부
(코로나19) 65세 이상,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·입소자
 - 인플루엔자·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 및 접종 독려 지속(~'26.4월)
- **(방문건강관리)** 전국 보건소(262개)를 통해 건강관리 대상자(약 100만 가구)*에 겨울철 건강관리 교육, 한파 대비 방문·전화 통한 건강상태 파악(~'26.2월)
 - * 65세 이상 노인(연령 기준), 기초생활보장수급자·차상위 계층(경제적 기준), 독거노인·중장년 고독사 위험군(사회적 특성), 만성질환 위험군·장애인(건강 특성) 등 우선 선정
- **(한랭질환 감시)** 전국 응급실(약 500개) 중심으로 한랭질환*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신속한 정보 공유 등 감시체계 운영('25.12월~'26.2월)
 - * 저체온증(심부체온 35°C 미만), 동상, 동창, 침수·침족병 등

3.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안정 지원

◇ AI·빅데이터 활용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대상별 맞춤형 지원 제공

1 AI·지역사회 기반 사각지대 발굴

- **(빅데이터 분석)**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이음)으로 입수된 위기징후 빅데이터*를 분석하여 약 30만 명의 복지위기가구 발굴(~'26.3월)
 - * 단전·단수, 건강보험료·통신비 체납 등 위기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7종
- 단전·단수·단가스 또는 요금체납 이력이 있는 독거노인·장애인 등 주거취약가구, 위기의심 아동, 거주불명 노인 등 집중 발굴
- **(AI 활용 초기상담)** 발굴 대상자에게 인공지능(AI) 활용 초기상담*을 실시('24.11월~, 전국 확대)하여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·지원
 - * 사전문자 발송 → AI 초기상담 실시(대표번호 1600-2129) → 지자체 심층상담·복지지원
- 지자체 복지공무원은 초기상담 이후 집중상담을 통해 기초생활보장, 긴급복지, 푸드뱅크 등 공공·민간 복지서비스 연계·지원
- **(지역사회 민관협력)**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'찾아가는 보건복지팀*' (1.4만 명 배치)을 통해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 및 찾아가는 상담 실시
 - * ('23) 3,426개소 → ('24) 3,461개소 → ('25.12월) 3,473개소
-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(26.7만 명), '좋은이웃들'(8.1만 명) 등을 통해 소외계층 발굴 및 공공·민간 지원연계
- **(정보제공 확대)** '복지멤버십*'에서 제공 중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천 대상사업(129종→163종, '25.12월~) 추가 확대 검토
 - * 가입자의 연령·소득·재산 등을 분석하여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서비스
- **(복지위기 알림 앱)** 복지위기 상황을 쉽고 빠르게 알릴 수 있는 모바일 앱*을 통해 현장의 위기가구 발굴·지원
 - * 도움요청(본인·이웃) → 접수·지자체 배정 →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

2

대상별 맞춤형 지원

- **(노인)** 한파·대설특보 발효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(3.7만명)를 통해 취약노인(55만명) 유선·방문 등 안부확인(~'26.3월)
 - 치매 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지원*하고, 겨울철 치매노인 실종 예방과 조속한 복귀를 위해 인식표 및 배회감지기** 보급
 - * (검사비)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상한 8~11만원 / (치매치료관리비) 월 3만원 한도
 - ** 민간기업 사회공헌활동으로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중
 - '26년 노인일자리 5.4만개 확대('25년 109.8만개 → '26년 115.2), 혹한기 활동시간 단축(월 최대 15시간) 및 비대면 교육 활동 대체 운영
- **(장애인)** 독거노인·장애인 가구에 ICT 장비를 설치*(27.8만 가구)하여 응급상황 발생 신속대처 지원 및 한파특보 시 기상 알림서비스 제공
 - * 화재감지기, 응급호출기, 활동량감지기 등으로 응급상황 감지 시 자동으로 119 신고
 - 폭설·한파 등 천재지변으로 보호자가 일시 부재한 경우,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특별지원급여 제공(월 20시간, 33.5만원 한도)
 - '26년 장애인일자리 2.3천개 확대('25년 3.35만개 → '26년 3.58), 혹한기 소정근로시간 내 업무 시간 및 근무지 조정(실외→실내) 운영
- **(노숙인 및 쪽방주민)** 폭설·한파 대비 노숙인 밀집지역에 응급잠자리*(전국 277개소) 제공, 침낭·햇팩 등 난방용품 배포 및 식사 제공
 - * 노숙인시설 내 수면 공간 또는 쪽방, 여인숙, 고시원 등을 임대하여 한시적으로 지원
 - 중앙-지자체-노숙인시설 간 비상연락체계 운영,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순찰 등 현장지원* 강화
 - * 주·야간 주기적 순찰을 통해 안부 확인, 구호물품 전달, 응급조치 등
- **(아동)** 겨울방학 급식 공백에 대비하여 결식우려 아동*(약 27만명) 적극 발굴, 지역 인프라 통한 급식 지원('25년 1식 9.5천원 → '26년 10천원 이상 권장)
 - *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가정 등의 아동, 그 외 교사·사회복지사 등이 결식이 우려된다고 추천·결정한 아동, 지역아동센터·복지관 이용 아동 등

【 저소득층 소득 보장 】

- **(기초생활보장)** '26년 기준 중위소득*을 역대 최대 수준**으로 인상 (6.51%, 4인가구)하고, 제도개선을 통해 대상자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
 - * 14개 부처 80여개 정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
 - ** 기준중위소득 인상율(전년비, % 4인가구) : ('23) 5.47 → ('24) 6.09 → ('25) 6.42 → ('26) 6.51
- **(생계급여)** '26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 12.7만원 인상(207.8만원, 4인 가구), 소득공제 확대 및 재산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('26.1월)
 - 청년 근로·사업 소득공제 확대(29세 이하→34세 이하, 40만원+30% →60만원+30%), 자동차 등 재산 기준 완화* 및 특례 신설** 등
 - *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(월 4.17%)를 적용하는 다자녀 기준 완화(3명→2명) 등
 - ** 국가 불법행위 피해 배상금·보상금 등 일시적 지원금은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
- **(의료급여)** 수급권자 소득으로 간주하는 부양비* 제도 폐지, 노숙인 의료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신청 절차 간소화 지원** ('26.1월)
 - * 부양의무자가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간주하고, 수급권자 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
 - ** (기준) 노숙기간 1개월←3개월 이상 & 건강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 체납 3개월←6개월 이상 (절차) 주민등록말소자의 경우 건강보험 증빙서류 제출 절차 생략
- **(임금체불 적극 해소)** 설 명절 전 지방노동청 중심 집중 현장 행보*를 통해 체불 청산 및 예방 지도(3주간, '26.1.26~2.13일)
 - * 고액집단 체불사업장(1억원 이상, 피해 노동자 30인 이상), 체불 신고사건 전수 조사 사업장 등 대상
- **(체불사업장 전수조사)**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 대상으로 임금체불 전수조사 추진 및 전수조사 범위 확대*
 - * '25년 3회 이상 체불 신고 사업장 → '26년 2회 이상 → '27년 전체 체불 신고 사업장
- **(사업주 자진신고 유도)** 사업주 임금체불 자진신고 시범 실시 ('25.12월~) 및 시범실시 성과를 토대로 법제화 방안 검토
- **(긴급복지)**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생계지원금 인상* 및 동절기 연료비 지원금 추가 지원(월 15만원, ~'26.3월)
 - * (1인가구) '25년 73만원 → '26년 78만원, (4인가구) '25년 187만원 → '26년 199만원

【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】

- **(주거취약계층 이주 지원)** 쪽방·옥탑방 거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거주를 위해 공공·민간임대로의 이주 지원*
 - * (이사비 지원) 이사비·생필품 등 최대 40만원/ (보증금)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 무이자 대출, 민간임대 최대 1억원 대출 지원(5천만원 무이자 + 추가 1%대 저리)
- **(긴급지원주택)** 재해 등 불의의 상황으로 퇴거위기 등 주거위기에 처한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공가(空家) 임시 제공(’26.1월~, 최대 6개월)
 - 지자체 수요 및 공가 현황을 바탕으로 순환형 긴급지원주택*을 공급하고, 재해·재난, 지자체 요청 등 추가 수요 발생 시 즉시 공급
 - * LH 공가를 지자체에 공급하고, 지자체에서 현장여건에 따라 순환형으로 주택을 지원
- **(전세임대주택 공급)** 주거위기상황 가구*를 대상으로,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·선정절차 적용 없이 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(연중 상시)
 - * 재해, 가정폭력, 실직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 대상자 등
- **(주거급여)** 중위소득 48% 이하* 임차가구를 지원하며, ’26년 기준 임대료를 지역·가구원수에 따라 1.7~3.9만원 인상하여 지원
 - * 중위소득 48%, ’26년 : (1인) 123.1 (2인) 201.6 (3인) 257.2 (4인) 311.7만원/월

【 나눔문화 확산 】

- **(그냥드림 확대)** ’25.12월부터 시범사업* 중으로, ’26년부터는 민간 재원과 함께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국민 기본 먹거리 보장 강화
 - * ’25.12월~’26.4월, 1인당 3~5개 품목 먹거리·생필품(2만원 한도) 제공
→ 日 평균 약 900명 취약계층에 대한 물품 지원 중
 - 그냥드림 코너 150개소 이상으로 확대*(~’26.上) 및 이동형 코너 도입**을 통해 거동 불편자(노인, 장애인 등), 격오지 거주 취약계층 지원 강화
 - * 15개 시·도, 69개소 운영 중(’25.12월말 현재)
 - ** 예) 신안군: 이동식 그냥드림카를 운영하여 도서 지역 방문서비스 운영(’25.12월~)
 -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방한 지원 실시
 - * 그냥드림으로 발굴된 위기가구에게 신한금융그룹 후원 방한용품 지원(’26.1~2월 총 2억 원)
 - 지방정부 자체 복지사업 및 지역복지자원 연계 등을 통해 지역맞춤형 그냥드림 운영
- **(구호식품 지원)** 방학 중 저소득 아동 등 취약계층 영양지원과 결식예방 지원 물품 비축*·긴급지원 준비(전국 푸드뱅크, ~’26.2월)
 - * 영양지원사업 8,000팩, 저소득 결식아동 4,000팩
 - 취약계층 추가 지원을 위해 대기업 등 민간자원과 연계 확대 추진

4. 동절기 국민 안전 확보

- ◇ 연말·연시 인파 밀집지역 및 민생시설, 도로 안전 등 집중 관리, 한파에 취약한 사업장·전통시장 안전도 철저히 관리

1 인파 밀집지역 집중 안전관리

- '연말연시 인파 특별대책기간'(25.12.19~26.1.4일) 지정하여 안전 관리계획 수립, 관계부처-지방정부 합동 사전점검 및 상황관리 실시
 - (해남이·해맞이 지역) 17개 시도 373개소 선정, 9개소 지역*은 중점관리지역(순간최대 2만 이상)으로 지정하여 행안부 중심 현장관리
 - * (신년 타종) 종로, 명동, 대구중구(해남이·해맞이) 아차산, 광안리, 간절곶, 경포대, 정동진, 향일암, 호미곶
 - 기타 364개소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자체 상황관리 추진
 - (현장 상황관리지원관 파견) 기간 25.12.31~26.1.1일, 규모 9개반 18명(행안부, 일부 지방정부·경찰·소방) 합동 상황관리 및 신속 대응

2 폭설·결빙 대비 도로 등 안전관리

- 겨울철 폭설 및 도로 살얼음에 대비하여 제설대책기간 실시(~26.3.15일) 및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 등 긴밀한 대비·대응체계 운영
 - 고속·일반도로 결빙취약구간(490개소) 지정하여 도로순찰 강화, 제설제 예비살포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 하향 조정(20~50%)
 - 폭설 재해우려지역 정기·수시 점검 및 결빙주의표지·적사함 등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, 폭설 피해 우려가 있는 시설물 보수·보강 지속 실시

3 민생시설 화재 등 안전 점검

- 연말연시, 설날, 한파 등 취약시기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 근무 실시(~26.2월)로 대형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 최소화
 - 현장 안전점검, 위험요인 사전제거, 신속한 현장대응활동 체계 구축,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및 비상연락망 상시 유지
-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민생시설 대상 관계부처-지방정부 합동 점검(25.12월)* 결과 토대로 미비점 신속 보완 조치
 - * (소방청) 쪽방촌(3,562세대), 지하상가(88개소), 고시원(2,197개소) (복지부) 요양병원(1,312개소), 사회복지시설(3,731개소 등)

4 사업장·노동자 안전 관리

- **(감사·대응체계 구축)** 한파에 따른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단계별 비상대응반* 구성·운영
 - * (관심 단계) 노동부 본부 → (주의·경계) 지방관서·안전공단(부서장) → (심각단계) 기관장 격상
- 노동부 지방관서별로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하는 시설관리업, 건설업, 운수창고업 등 한파 취약사업장 DB 구축(3만개)
- ‘중대재해사이렌’(9만명 가입) 활용, ①한파특보(주의보·경보) 상황, ②「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」, ③한파 재해사례 전파 등 중점관리
- **(합동점검) 생활폐기물 사업장 중심으로 안전·보건조치 및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* 준수 여부 등 지방정부 합동점검(100개소 ~'26.1.30일)**
 - * ①따뜻한 옷, ②따뜻한 쉼터(휴식), ③따뜻한 물, ④작업시간대 조정, ⑤119 신고
- **한파 취약사업장 대상 한랭질환 위험요인 집중점검(4,000개소 ~'26.3.15일)**
 - * 한파안전 5대 기본 수칙·질식사고 예방 3대 수칙·12대 핵심 안전수칙 등 확인

5 전통시장 안전 관리

- **(설명절 대비 특별점검) '25년 정기점검 결과 소방 취약시장을 대상으로 '설명절 대비 특별점검' 실시 및 취약시장 집중관리**
 - * (기간·규모) '26.1.5~2.6일, 전국 전통시장 69곳
- “소상공인 24”를 통해 개선 조치여부 등 지속 관리, 미조치 시장은 사업 패널티* 부여 → 적극적인 개선조치 이행 유도
 - * ①안전관리패키지 감점(△10점), ②타 전통시장 지원사업 감점(△5점) 등
- **(안전점검 강화) 전문기관, 퇴직소방관 등 전문가 Pool 구성하여 전기·가스·소방 분야 안전지킴이* 운영 및 점검 전문성 확보('26.1월~)**
 - * 화재 발생시 현장출동, 상황 모니터링 및 피해 점포에 지원 안내, 전통시장 특별점검 등
- 분야별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상인 스스로 안전점검 할 수 있는 ‘자가점검 매뉴얼’ 제작·배포로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

V. 추진계획

추진과제 목록	시행시기	소관부처
1. 동절기 물가 안정		
①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	'26.1월	기재부
② 설 명절 대비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추진	'26.1월	농식품부 ·해수부
③ 계란 수급 안정방안 마련	'26.1월	농식품부
④ '26년 농식품바우처 대상 확대 및 지원기간 연장	'26.1월	농식품부
⑤ 유류세 인하 및 경유·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	~'26.2월	기재부·국토부
⑥ 대중교통 정액패스(모두의 카드) 신규 도입	'26.1월	국토부
⑦ 지방 중소기업 직장인 점심값 지원	'26.5월	농식품부
⑧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	'26.1월	농식품부
2. 한파 대비 난방·건강 지원		
1) 취약계층 난방지원 확대		
① 에너지바우처 확대 및 사각지대 개선	'26.1월~5월	기후부
② 전기요금 할인 및 누락가구 적극 발굴	~'26.3월	산업부
③ 도시가스 할인 및 가스공사 누락가구 적극 발굴	~'26.3월	산업부
④ 연탄쿠폰 지급 및 난방시설 교체 지원	~'26.4월	산업부·기후부
⑤ 난방용 땀감 지원	~'26.2월	산림청
⑥ 경로당 및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	~'26.3월	복지부
⑦ 저소득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난방효율 개선	'26.1월	복지부
2) 선제적 건강관리 지원		
① 고위험군 무료 예방접종 및 접종 독려	~'26.4월	질병청
② 보건소 건강관리 교육 및 방문건강관리	~'26.2월	복지부
③ 전국 응급실 중심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	~'26.2월	질병청
3.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안정 지원		
1) AI·지역사회 기반 사각지대 발굴		
① 위기징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복지위기가구 발굴	~'26.3월	복지부
② 인공지능 활용 초기상담 전국 확대 실시	'26.1월	복지부
③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등 통한 소외계층 발굴	'26.1월	복지부
④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천 대상사업 추가 확대 검토	'26.1월	복지부
⑤ 모바일 앱을 통한 현장 위기가구 발굴·지원	'26.1월	복지부
2) 대상별 맞춤형 지원		
① 한파·대설특보시 취약노인 유선·방문 등 안부확인	~'26.3월	복지부
② 독거노인·장애인 가구 ICT 장비 설치	'26.1월	복지부
③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특별지원급여 제공	'26.1월	복지부
④ 노숙인 밀집지역 응급잠자리 제공 및 난방용품 등 배포	'26.1월	복지부
⑤ 겨울방학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	'26.1월	복지부

추진과제 목록	시행시기	소관부처
3)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		
【 저소득층 소득 보장 】		
① 생계급여 최대지급액 인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	'26.1월	복지부
② 노숙인 의료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신청절차 간소화	'26.1월	복지부
③ 위기 저소득 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	~'26.3월	복지부
④ 동절기 연료비 지원금 추가지원	~'26.3월	산업부
⑤ 설 명절전 지방노동청 중심 임금체불 청산·예방 집중지도	'26.1~2월	노동부
⑥ 임금체불 전수조사 범위 확대	'26.1월	노동부
⑦ 임금체불 자진신고 시범실시 및 법제화 방안 검토	'26.1월	노동부
【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】		
① 주거취약계층 공공·민간임대 이주지원	'26.1월	국토부
② 주거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 공가 임시제공	'26.1월	국토부
③ 주거위기상황 가구 대상 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	'26.1월	국토부
④ 주거급여 지원금액 인상	'26.1월	국토부
【 나눔문화 확산 】		
① 그냥드림 코너 개소수 확대(이동형 그냥드림 도입 포함)	'26.1월	복지부
② 민간 연계를 통한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방한지원 실시	'26.1~2월	복지부
③ 지역맞춤형 그냥드림 운영	'26.1월	복지부
④ 저소득 아동 등 영양지원 및 결식예방 지원	~'26.2월	복지부
4. 동절기 국민 안전 확보		
1) 인파 밀집지역 집중 안전관리		
①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사전점검, 상황관리	~'26.1월	행안부
② 해넘이·해맞이 9개소 지역 등 현장관리	'26.1월	행안부
2) 폭설·빙판길 도로 등 안전관리		
① 제설대책기간 실시 및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 운영	~'26.3월	국토부
② 재해우려지역 수시·정기점검 등	'26.1월	행안부
③ 결빙취약구간 관리 및 제한속도 하향 조정	'26.1월	국토부
3) 민생시설 화재 등 안전 점검		
①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실시	~'26.2월	소방청
②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 대상 미비점 보완 조치	'26.1월	행안부·소방청·복지부
4) 사업장·노동자 안전 관리		
① 한랭질환 산재 예방 단계별 비상대응반 구성·운영 및 DB 구축	'26.1월	노동부
② 생활폐기물 사업장 합동점검	'26.1월	노동부
③ 한파 취약사업장 한랭질환 위험요인 집중점검	~'26.3월	노동부
5) 전통시장 안전 관리		
① 설명절 대비 특별점검 및 취약시장 집중 관리	'26.1~2월	중기부
② '소상공인 24' 통해 미조치 시장 패널티 부여 등 지속 관리	'26.1월	중기부
③ 전기가스소방분야 전문가 Pool 구성 및 안전지킴이 운영	'26.1월	중기부